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533호 (음력 3월 26일)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주 주정차과태료 과·오납 3년새 2배 증가…환급은 주먹구구

2020년 102건서 2022년 212건…대부분 행정착오 탓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를 문자·전자우편 보내야 환급

개인정보 유출·도용 우려에 전화 금융사기 오해까지

광주에서 자치단체의 착오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초과 또는 잘못 납부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는 체계화되지 않아 시민 혼선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1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납·오납 사례와 이에 따른 환급액은 ▲2020년 102건(385만 60원) ▲2021년 132건(533만7440원) ▲2022년 212건(889만1290원) 등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건수·환급 규모 모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 자치구에서 과오납 사례가 급증,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4월까지 광주 지역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39건, 단속 행정이 시민에게 돌려준 과태료는 183만 2424원이었다.

행정구역 면적·인구·단속 장치 설치 현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마다 과·오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 당국의 단속 행위 또는 과태료 부과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잘못 판단해 과태료를 더 부과하거나, 단속 장치가 인식한 차량번호 자체가 틀려 잘못 부과한 경우가 많다. 위반 장소 내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가 분명치 않아 과태료를 돌려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서구 지역 주정차 단속 구역 11곳에서 고정형 카메라가 단속 유예시간에도 차량 179대를 위반 사례로 인식,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서구청은 해당 고정형 카메라 설치 구역 내 단속자료를 집적화한 서버 1대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단속 행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 환급은 행정 절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각 자치구는 자체 검수 또는 이의 제기 등을 통해 과오납이 확인되면 단속 당시 촬영·인식한 차량 번호를 토대로 등록 차주 주소, 연락처부터 확인한다. 이후 공문 발송 또는 통화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 과오납 사실을 알린다.

환급을 받으려면 차주는 계좌번호 또는 통장 사본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치구에 보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자치구는 과오납 과태료를 해당 계좌로 이체한다.

이 같은 환급 절차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도용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선 공무원들도 행정 당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는 일반 휴대전화로 주고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차주 상당수는 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로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 입장에선 '과태료를 돌려주겠다'는 단속 공무원의 말을 단 번에 신뢰하기 어렵다.

단속 행정에 대한 불신이 허술한 환급 체계로 또 한 번 깊어지는 악순환인 셈이다.

반면 단속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에 써야할 시간을 허비하고 심적 고충도 크다고 토로한다.

체계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오납 과태료 행정은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다. 어느 자치구는 과오납 공지 공문부터 발송하지만, 전화 안내만 하는 곳도 있다.

일선 공무원들 역시 과태료 환급 절차 관련 체계화·전자시스템화에 공감한다.

한 단속 공무원은 "신고·환급 절차가 간소화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비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못 미더울 수 밖에 없다"며 "과·오납 건수가 많지 않은 자치구에선 자체적으로 전산 체계화를 할 수는 없다. 광역자치단체 차원만이라도 온라인 간소화 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구 단속 공무원은 "과태료는 세외수입인데 이를 환급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고 단속 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을 받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다"라면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재환 기자

43주기 맞는 5·18, 민주묘지 참배 행렬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헌화를 마친 참배객들이 열사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산 자여 따르라" 여·야 정치권, 5월 광주 '참배 행렬'

민주·국힘·진보정당 지도부 '광주로'

文, '전임 대통령' 최초 5·18묘지 참배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들에게 5·18기념식 전원 참석을 독려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KTX 특별열차를 타고 18일 오전 광주로 내려올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 등 친이준석계 의원들과 김병민 현 최고위원 등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전야제에 참석하고,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린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넣겠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껴안기'를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도 전원 참석 방침을 정하고 17일부터 5월 항쟁의 현장을 돌며 '그 날의 아픔'을 되새길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는 17일 국립 5·18묘지와 인근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잇따라 참배할 예정이다.

전임 대통령이 5·18기념일에 맞춰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일 전 야권 인사들의 참배는 줄을 이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국립 5·18묘지에 분향한 뒤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자리를 옮겨 고(故) 이한열 열사 묘소에 헌화하고,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민주당 기동민·김영호·박상혁·강훈식·천준호 의원 등도 5·18 전 마지막 주말에 차례로 민주묘지를 찾아 추념탑 앞에서 오월 영령에 묵념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 지역위 당원 200여 명과 함께 헌화·분향한 뒤 항쟁 당시 헌혈 후 계엄군의 흉탄에 숨진 고(故) 박금희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5·18 묘역을 지역구로 둔 조오섭 의원은 올해도 '5월 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 묘역 현장 안내소'를 운영 중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출마 입지자들의 참배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와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단이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 정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진보당도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강성희 의원과 윤희숙 상임대표 등이 13일 참배를 마쳤고, 14일에는 청년 진보당원 40여 명이 묘지를 찾았다.

최이슬 기자